

동아시아 영토 분쟁
반제국주의 좌파의
관점

▶ 5, 7 면

범죄의 정치경제학
이호중 교수
인터뷰

▶ 2 면

남아공 광원 학살
산산히 부서진
해방의 꿈

▶ 8~9 면

현대차 투쟁 잠정 평가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 10~11 면

중국의 위기
부패, 분열,
경기 후퇴

▶ 6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1821003 36

Left21.com

제88호 | 2012년 9월 3일 ~ 9월 16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침략 역사 부정하는 노다

독재 역사 부정하는 박근혜

불법파견 부정하는 정몽구

적망 유박 범죄자들



▶ 관련기사 3 · 5 · 10 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국민노총 김준용: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실 거죠?”
박근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와
박근혜의 주고 받기
지들끼리 묻고 답하는 '소통'

“민주당의 구태정치는 ... 학교폭력
이나 묻지마 살인행위 등에도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의 억지

“야당이! 입만 열면 유신이니,
5·16이니 ... 늘어놓으니 국민들이
짜증스러워 하고, 그 짜증이 범죄 심
리로 까지 연결된다.”
이한구를 거드는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박 후보는 우리 나라의 상처난 곳을
치유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대
선 캠프를 '박근혜판 힐링캠프'로 생
각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호중,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겠지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감옥에서 빼 달라는
최시중의 애걸복걸

“국방부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고 있
다. 국방부에 감사한다.”
국방부 급서 지령 덕에
책이 많이 팔린 장하준

“어느 대통령 후보를 만났다가 그분
이 썼던 책에 나오는 내용을 화제에
올리자, '그거 무슨 책에 나오는 이야
기인가'라고 되물더라.”
〈조선일보〉강천석

“개와 외국인, 종북주의자 출입금지”
‘다문화 반대’ 카페 대문의 역겨운 문구

“풀이 이길 것인가? 낯이 이길 것인
가? 배어도 우리는 또 자라난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파업 농성장 벽보

“회사에 먹찰하려고 하느냐, 누가 봐
도 우리 회사가 연상되지 않겠느냐.”
MBC 경영진, KEC 노동자
탄압을 다룬 프로그램 방송 불허 이유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9월 17일)

강남역 11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격주 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9월 18일)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천 주안역 2번 출구
울산 현대차 4공장구 정문 건너편 6시 45~8시 40분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칠(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묻지마 범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현상은 결국 사회적 소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이 그와 같은 살인으로 연결된 거죠. 결국은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나라 자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 보려는 희망이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선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는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 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양극화 등이 배경이라고 봐야 해요.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전자발찌 등을 확대하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도 사용 이후에 범죄율이 줄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아요. 전자발찌라는 게 사실 한 사람을 낙오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도 못하죠. 결혼도 꿈꾸기 힘들죠. 취업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조치예요.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와 같은 보복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전자발찌를 차고 그 게 5년, 1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2, 제3의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저지른 범죄도 살인까지 갔잖아요.
전자발찌와 같은 '위험예방' 정책이 실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위험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악순환에 빠져요. 최근에 '전자발찌도 한계가 있다 더 센 거로 가자'며 화학적 거세 같은 방법을 도입하자는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화학적 거세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만, 그것도 정신 성적 장애자로 장애를 받아야만 진단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착증이 아닌 사람들도 응징적인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거죠.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같은 제도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전통적인 형벌 제도에서 벗어나 위험한 사람들을 사



조원아 기자

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성폭력 범죄의 70~80퍼센트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범죄예요. 그런 것들이 전자발찌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폭력 범죄의 예방 정책은 성적인 행동에 대한 소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배려 존중, 인권의 차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어야 되는 거죠. 성폭력 범죄가 언론이 떠드는 것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무나 잡고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성폭력 예방 정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범죄 정책이 선거에서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성폭력 문제가 여성의 표, 아이를 둔 부모의 표를 끌어 모으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성폭력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된 결과이기도 해요. 범죄 정책은 역사를 보면 정치경제학적 흐름과 맞물려서 변천해요. 1960~70년대 복지국가가 서구의 주된 흐름이었을 때는 범죄 정책도 복지정책으로 나타나요. 즉, “이 사람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도와 줘야 하는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다”라는 시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심리 치료,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복지 정책이 주류를 이뤄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정치경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돌아서면서 범죄 정책에서도 복지가 후퇴해요.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버리는 거죠. 이제는 “너처럼 가난한 사람은 한 둘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절도를 하나, 니가 나쁜 놈이다”는 경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개인의 책임



조원아 기자

범죄를 빌미로 경찰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지배자들이 부추기는 빈곤과 소외가 범죄를 낳고 있다.

으로 돌리는 거죠. 이와 함께 치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위험한 사람들을 국가가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현상이 결합합니다. 결국 형벌 정책이 위험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통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정책이 범죄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돼 있어요.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 조치를 대폭 강화하려고 해요. 정신질환자 자체를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격리하면서 통제하는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제 강화 정책은 실제로는 다분히 허상에요.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놔 둔 상태에서 위험한 인물 몇 명만 통제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환상이죠. 언론과 국가가 위험한 사람을 골라 내서 통제한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거예요. 일종의 이데올로기 효과죠. “너의 환경을 둘러싼 위험 요인들은 국가가 통제를 해 주니까 너는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스펙을 잘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범죄 문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범죄를 낳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해요. 성폭력 범죄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합니다. 인권 교육이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저는 성폭력 범죄를 성적 충동이 원인이 되는 폭력성 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은 다분히 상대방에 대한 지배 욕구가 있는 범죄라고 봐요. 다분히 한국 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꿔 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은 사회적인 연대성을 강화해야 해요. 범죄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해요.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극단적인 범죄와 자살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 주는 정책, 즉 일차적으로는 복지와 교육을 개선하고, 임시경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계간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여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봄/여름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2. 1930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주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주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파산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공통점이다. 통합진보혁신노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민과 참여계 지도자들조차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이제 와서 노동 중심을 말하는 데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사실 유시민은 민주당 정부 고위직에 있을 때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선거 도전이 결국 한나라당 좋은 일만 시킨다며 ‘사표론’을 퍼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전면적 결합”을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있다.

결국 유시민 등이 말하는 ‘노동 중심’은 노동자들을 득표와 재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뜻이 강하게 보인다.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인사들이 ‘노동 중심’을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게 들린다. 이들이 추진한 참여당과의 통합이 야말로 민주노동당의 노동 중심성을 크게 약화시킨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유시민 같은 인물이 주도하는 친자본주의 정당과의 통합이 노동 중심성을 훼손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이 ‘물지마 통합’을 위해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강령과 정책, 당구조 등에서 ‘노동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민주노동당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시작된 ‘민주노조 운동’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등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조직화한 노동자들이 기성정당과 독립적인 진보 정당 건설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조합 운동이 위기를 맞으며 민주노동당도 위기를 겪었다. 위기의 핵심은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협상이나 부분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전략 즉, 개혁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었지만 그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노동자들은 진보적 과제를 수행할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발휘하도록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구실이 돼야 한다.

양상은 다양했다.

주류 언론과 지배자들은 이런 위기를 노동조합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마녀사냥과 공격의 기회로 활용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이 노동조합 운동과 조직 노동자에 기반을 둔 진보정당이라는 모델과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이끈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을 ‘민주노동당’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정당화’하려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민주노총당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당의 주도권을 차지한 자민통 경향 지도부의 전략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내 경쟁에서 벗어난 당권파 지도부는 자본가 정당과의 동맹을 통한 집권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을 거침없이 추진했고 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 중심성을 더한층 후퇴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이하 새정치특위)가 새로운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동 중심 진보정당은 “강령과 목표에서 자본주의 극복의 가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강령에서도 노동 중심의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새정치특위의 지지도 전적으로 옳다.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 모임’이 제시한 원칙 - 반자본주의, 참여당계와의 통합 반대, 연립정부 참여 반대 - 도 이런 취지와 통하는 점이 있다.

노동자 착취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 중심성을 일관되게 지키려면 노동계급에 기반을 두고 자본가들과

는 독립적인 정당이 필요하다. 비록 개혁주의 정당의 노동계급 기반은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조직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리정치기구에 불과한 ... 진보정치는 ... 다른 낡은 정치와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 노동’과 ‘미조직 노동’을 대립시키는 이런 이분법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주장에는 비정규직화·정리해고에 맞서 “거대 조직노동 운동이 수행한 96~97 총파업과 2003 비정규직 철폐 요구 및 열사 정국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에스제이엠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은 억압적 ‘거대 조직노동’과 저 애처로운 ‘배제된 노동’ 중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박가분, <한겨레>) 하는 비판은 타당하다.

진보정당에 ‘노동 중심’이 필요한 까닭

은 단순히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늘 가장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진보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거대한 작업장으로 끌어 모으고, 그들을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연결시키고, 도시로 집중시킨다. 무엇보다 그들이 일손을 놓으면 자본가들은 이윤에 타격을 입는다. 이는 노동계급에게 엄청난 정치적 잠재력을 부여한다. 마르크스가 사회 변혁을 위한 그의 정치에서 기본으로 삼은 것은 노동계급의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었다.

이 잠재력은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과 자본가들에 스스로 맞서 싸울 때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노동 중심’을 구현하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장호중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경쟁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신화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이 휴대전화 디자인 쟁점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을 편들면서, 이 체제의 정신 나간 면모가 드러났다.

미 법원은 한국 기업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훔친 대가로 애플에게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사각형 몸체에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싸워 왔다.

한국에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는 두 기업 모두 서로를 베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진 상품이 있다. 애플이 3G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삼성의 기술을, 삼성은 화면 스크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애플의 기술을 베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그들의 최고 상품 중 일부는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애플과 삼성 사이의 다툼은 기업들이 돈 되는 독점권을 지키려 싸우는 것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법원 밖에서는 이 두 기업은 철천지 원수라 하긴 힘들다. 둘은 서로에게 수익성 좋은 생산-공급 파트너다. 아이폰 부품의 4분의 1 이상을 삼성이 만든다. 바로 그래서 애플은 삼성의 최대 고객이기도 하다.

핸드폰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만든 것이 어느 브랜드로 나가는지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똑같이 지옥 같은 공장에서, 악명 높은 폭스콘 같은 하청업체들에 고용돼 일한다.

치명적인

지적재산권법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제약회사들은 특허약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매년 수백만 명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사망자들은 신약을 연구하기 위한 보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지적재산권법은 기업들이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보다 다른 제약회사들이 가

진 특허권을 피해 가며 비슷비슷한 약을 만드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게 한다.

경쟁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다. 경쟁을 도입하면 통신비를 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표적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을 민영화했지만,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가계부담지수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2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KT·SKT·LGT 등 사기업의 이익만 늘어났을 뿐이다.

정치인들은 경쟁이 사회를 조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이 불러오는 혼돈과 파괴야말로 왜 우리가 다른 체제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지를 보여 준다.

물론, 우리는 죽음의 공장 폭스콘을 만들며 노동자들을 조작취해 온 애플이나, 백혈병 노동자들을 나몰라라 하며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하는 삼성 중 어느 쪽도 편들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인간의 필요를 위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독점권 경쟁은 약이 있어도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미친 현실을 만들고 있다.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김영익

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낚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 민주당 정부는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인정했던 ‘고노 담화’마저 부정하며,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서 증언하고 있는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니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한편 동중국해의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노다는 “센카쿠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획득한 영토”라며, 다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8월 21일부터 동중국해 도서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연합 상륙훈련을 했고,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상륙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호전적 조처들이 잇달아 실시됐다. 중국 지배자들도 이에 크게 반발해, 맞불 훈련을 하는 등 이 지역의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실 독도, 다오위다오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의 기원에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1905년 러일전쟁 때 독도를 강탈했다. 일본이 다오위다오를 차지한 것도 1879년 오키나와를 강제 병합하고 1895년 청일전쟁으로 타이완을 빼앗는 점령 과정의 일부였다. 심지어 오늘날 남중국해 도서 분쟁의 불씨도 1930년대 말 일본 제국주의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등을 점령하면서 비롯됐다.



비상사태시작을 알리는 일본 해상자위대함

일본 자위대의 해상 훈련 일본 지배자들의 군사대국화 야욕은 동아시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뒀다. 1949년 소련 핵실험, 중국 국민당 패배 등에 대응해 미국은 이른바 ‘역코스 전략’을 채택하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침략 과거를 덮어 주고 일부 도서 지역의 영유권 문제는 모호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들에서 간헐적으로 갈등이 일

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주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포위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과 관련이 깊다.

새로운 국면

미국 지배자들은 2008년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패배 속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직접적

으로 견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양보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미 간의 갈등은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맞물리는 양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을 펼친 2010년 무렵부터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영유권 분쟁이 훨씬 더 빈번해지고 격렬해졌다. 미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주변 국가들에게 접근해 보호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중국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다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해상 충돌, 올해 초 남중국해 황선다오에서 한 달 넘게 지속된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대치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모두 중미 갈등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층선’에 해당한다.

일본 지배자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승해,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펼치는 것도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1990년대 동안 꾸준히 진척돼 온 일본의 군국주의 흐름은 근래 들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가시화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올해 들어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적 방위’ 개념을 도입했고, 동중국해 도서 지역에서 자위대 병력을 증강했다. 6월 원자력법을 개정해 핵무장의 길을 트 데 이어, 일본 총리 자문 기구인 국가전략회의는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 지배자들은 독도와 다오위다오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한일 간의 갈등이 주로 국내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양국 정부들의 의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건 너무 협소한 관점이다. 한일 지배자들이 대체로 미국의 동맹하에 협력해 왔지만,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화에 식민지 경험이 있는 주변 국가들의 민중이 크게 불안해 하며 정당한 반발을 하는 것이다.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키울 불씨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지금 당장 동아시아의 지배자들이 사태의 악화를 막으려고 갈등을 ‘봉합’

할 수는 있겠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올라 게 분명하다. 그래서 올해 일본의 국가전략회의와 중국의 관영 언론 <환구시보>가 모두 다오위다오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이 주장하는 대로 독도 문제 등에서 “우리 대표자(이명박)의 편에 서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이명박을 비롯한 남한 지배자들이 일본 지배자들과 군국주의화에 일관되게 맞설 리 없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며 일본의 재무장에 길을 열어 준 것이 한국 지배자들이었다.

남한 국가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남한 지배자들도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추기는 한 축이었다. 남한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려 왔으나,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며,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보조하는 파트너 구실을 했다.

일각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극단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위기 속에 제국주의적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에 항구

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몽상이다.

물론 일본의 군국주의화 행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는 민족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좌파들은 이를 ‘배타적’이라고 간단히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정서가 갖는 역사적 연원과 모순을 이해해야 한다.

좌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와 재무장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진정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성장시켜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국내 지배자들과의 민족적 단결이 아니라 일본의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반핵 운동 등과 연결되는 진정한 반제국주의적 국제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오위다오 — 침략과 갈등의 산물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오위다오 문제 역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러일전쟁 10년 전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전리품으로 타이완을 쟁했다. 다오위다오도 이 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 섬들은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돼 미국의 신탁통치 아래 놓이고 미군의 미사일 발사용 훈련 기지로 사용됐다. 그러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 함께 일본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이 지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과 중국·대만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크게 불거졌다. 최근 다오위다오 문제는 사실상 중미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여러 차례 확인시켰고, 사실상 일본을 편들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이 문제를 활용해 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해 베트남, 필리핀 등과 군사 훈련을 벌이고 협력을 강화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중국 견제를 위해 갈수록 협력 수준을 높이는 미일 동맹에 맞서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현주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곧 인류의 보편적 가치까지 훼손한 출발점이었다.”(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따라서 1905년에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주장은 이런 제국주의적 침탈의 역사를 개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1870년대와 1877년에 독도는 조선 영토이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는 일본 측 공식 기록도 존재한다.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자체가 사실상 일본을 패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 일본은 반인류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모두 면제됐다. 전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은 일본을 소련을

향한 공격 기지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자본주의의 ‘부흥’에 힘을 쏟고 동시에 신속히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 배상 따위는 이런 미국의 구상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됐다.

전후 구축된 미일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면서도 한일 간에 갈등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 왔다.

한편, 한국의 지배자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군사적·경제적으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었다. 한국·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합의(‘독도일약’)한 사실이 폭로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일본 지배자들이 다시 제국의 영광을 구가하려 하면서 독도에서 양보할 생각은 계속 사라져 왔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단순히 과거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맞서는 문제가 돼 있다.

이현주

중국의 위기 — 부패, 분열 그리고 경기 후퇴

찰리 호어는 중국의 경제 기적이 수명을 다한 오늘날, 중국 지배계급은 새로운 사회적 격변이 터져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찰리 호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다함께)가 있다.

올 초 유력 정치인 보시라이의 몰락은 중국 지배계급 내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현지 언론은 보시라이의 부인 구가 이라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녀는 영국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중국 내 부패는 보시라이와 구가이라이를 둘러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오늘날 중국 지배계급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중국에서 계급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냈다.

보시라이의 극적인 몰락은 1990년대 이래 중국의 고위 정치인이 겪은 불명예 중 가장 치욕스런 것이었다. 보시라이는 중국 남서부 충칭시의 공산당 고위 관리였다.

올해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새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다. 이 위원회 성원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 중 하나일 것이다.

올해 현 위원 9명 중 7명이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공석이 된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보시라이는 이 중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었다.

보시라이는 포폴리스트로 유명해서 그가 부패를 뿌리뽑고 문화혁명기의 ‘호시절’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보시라이가 사설 감옥을 운영하고 현지 사업가들을 협박해 자기 소유 펀드에 기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보시라이는 국가 내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충칭시 공안국장이 주변 성의 미국 총영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보시라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때, 보시라이의 많은 정적들이 기회를 포착해 그를 제거해 버렸다. 보시라이는 모든 공직에서 해임돼 자취를 감췄다.

보시라이는 “태자당”, 즉 아버지의 후광으로 권력을 쥐게 된 정치인들 중 하나다. 중국 지배계급 내에는 이 태자당과 자수성가한 정치인들 사이에 분열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정책적 차이가 아니라 개인적 경쟁 의식이다.

분열

태자당 내에도 심각한 분열이 존재한다. 중국 정치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가문 간 다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태자당의 일원인 시진핑은 올해 국가 주석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시진핑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의 공산당 내 지위가 올라가면서 가족 대부분이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중국의 최상층 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보다 조금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점에서 상하이 주변 도시 출신 사업가 린춘핑을 다룬 최근 보도는 아주 시사적이다.

중국 국영 언론 보도를 보면, 린춘핑



8월 25일 파업에 나선 광둥성 전자제품 공장 노동자들

은 지난 1월 텔라웨어에 근거지를 둔 애플랜틱 뱅크를 인수했다. 린춘핑은 정부의 임명직을 수락했고, 국영 언론은 마침내 그의 사업 경험을 “전설”이라 칭했다.

그러나 린춘핑이 그 밖의 다른 거래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자, 누군가 텔라웨어에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애플랜틱 뱅크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패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1990년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중국에서는 1980년대에 벌어졌다고 말한다.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국가 소유 산업들이 민영화하면서 그 산업을 운영하던 자들이 계걸음해 사적 자본가들로 변신했다. 그러나 중국은 좀더 복잡하다.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국가 소유 산업 또는 국가와 민간 자본(외국계인 경우가 많다)의 합작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경제 권력은 국가 내부에서 이동했다. 중앙의 지배계급은 경제 전 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지역의 관리자와 공무원들에게 맡겼다.

지역의 관리자와 공무원 들은 자기 지역에서 생겨나는 이윤을 유지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 이윤을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처는 지역 자본가를 육성하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부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가 구속됐는가 하는 것뿐이다. 부패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 주는 지표는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한 추정치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약 1만 6천 명이 부패사범이 되면서 중국에서 도피했다.

이들이 갖고 달아난 돈은 1천2백5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이 1년 동안 미국에서 수입하는 총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것은 중국의 최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패다. 그리

지난 20년 동안 파업, 집회, 시위, 폭동의 숫자가 급격히 증대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를 두고 “집단 돌발 사건”이라고 한다.

고 그 중심에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국가가 소유한 산업을 운영하고, 중국의 민영 기업 임원 중 약 40퍼센트가 공산당원이다.

부패가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일까? 일반 경제에서 부패는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중국의 공무원들은 자기 몫을 챙기려면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이 챙긴 돈 중 일부가 다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에서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 국가 기구는 팽창한 반면 세금을 직접 걷을 수 있는 기반은 축소했다. 이 때문에 1980년대에는 농촌의 산업이 팽창했고 1990년대에는 불법 세금이 일련의 저항을 촉발했다.

중앙의 지배계급은 신뢰할 수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지방의 공무원들에게 의존한다. 중국에서는 약 5천만 명이 국가에 고용돼 일한다. 그중 약 1백만 명만이 베이징의 직접 명령을 받는다. 나머지는 성(省), 도시, 농촌 등에 소속돼 있다.

이런 고질적인 부패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동시에 사람들을 단결시킬 잠재력도 갖고 있다. 누구나 부패한 관리자 또는 공무원을 알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박탈감 또한 커졌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특별히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파업, 집회, 시위, 폭동의 숫자가 급격히 증대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를 두고 “집단 돌발 사건”이라고 한다.

2004년에 약 8천 건이었던 “집단 돌발 사건”이 2007년에는 약 8만 건으로 늘었다. 중국 정부는 그 뒤로 이 건수를 발표하지 않지만 2010년에는 18만 건에 이르렀다는 추정치가 있다. 예컨대, 지난 6월에 광둥성 남부에서 폭동이 두 차례 번졌다.

더 최근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공장의 공해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두 건 발생했다. 이 대중 운동은 모두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벌어졌고,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공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 중 한 건은 승리해 공장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소요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다. 대부분 인민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파업도 계속 벌어진다. 심지어 국가 소유의 산업에서도 지방 관리자들이 임금 인상할 권한을 가진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국내 치안에 더 많은 돈을 쏟았다는 사실에서 중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공해

이것이 “중국의 봄”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소요들은 개별 공무원이나 관리자에 맞선 전투이지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파업은 일반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다. 2010년 여름에 자동차 산업에서 파업이 잇따랐다. 당시 파업의 조직 수준은 상당히 높았고, 노동자들은 공개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했다.

파업의 공세적인 요구 조건도 인상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과 더 적은 노동시간을 요구했다. 또 아주 구체적인 요구 조건도 있었다. 예컨대, 2백마일 떨어진 같은 회사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해 달라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연결돼 있어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 파업이 또 다른 파업을 촉발하는 경향도 있다. 새로운 세대의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농민공]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그들이 늘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부모 세대가 갖지 못했던 힘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이런 불만의 물결을 타고 넘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공산당의 다른 이들은 이런 불만을 흡수하려 하지만 이것은 위험 요소가 큰 전략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전, 러시아 관리들은 합법 노조를 만들어 불세비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혁명을 심화시켰다.

중국 지배계급에게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경기가 심각하게 후퇴한다면, 아래로부터 분노가 더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지배자들은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빠진 건 기폭제 뿐이다.

중국의 호황은 어떻게 파산했는가

중국에는 크게 두 차례의 성장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9년까지다. 두 번째는 1991년에서 2008년까지다. 두 번째 성장기의 바탕을 이룬 것은 흔히 외국 투자와 대규모로 합작한 연안 지역의 수출 산업이다.

이 산업은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끝없는 유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엄청난 게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 의료,

전자, 항공기 등 값가지 제품을 생산했다.

변화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2000년에 중국에서 제작된 DVD 플레이어는 없었다. 그러나 2005년이 되면 중국은 세계 최대 DVD 플레이어 생산국이 된다.

이 덕분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성장이 가능했지만,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쓰인 일반적인 역사서들은 대부분 경제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 가정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수출 공장이 문을 닫으며 약 2천5백만~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국가는 주거,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정책 덕분에 경제가 한동안 안정화

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지표들은 중국 경기가 다시 급속히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건설 붐이 지속될 수는 없다. 아파트와 주택은 이미 빈 곳이 있다. 또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 때문에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의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16호 / 번역 조명훈

도약하는 일본 반핵 운동의 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는 이 뒤틀린 세상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 등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이후 이에 반대하는 거대한 새 세대 대중운동이 일본에서 탄생하고 있다.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20만 대중시위가 벌어졌고, 이 시위는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의 조직자 중 한 사람인 '모든 원전을 지금 당장 없애자! 전국회의(NAZEN)' 사무국장 오다 요스케를 인터뷰했다.

일본 지배자들이 핵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권과 핵무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다 정권은 방사성 '잔해'를 전국에 퍼트리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안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노동자를 피폭시키며 '복구와 안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전 한 기를 건설하면 건설업자는 5천억 엔(7조 2천억 원) 규모의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유치한 정치인은 3퍼센트(2천1백60억 원) 상당의 이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핵무장의 문제입니다.

6월 20일 일본 원자력기본법이 개악됐습니다. 원전의 이용을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확대하면서 '평화적 이용'이라는 베일을 공공연히 벗어 던졌습니다. 이를 제정한 자들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 면에서도 이해해야 한다"(자민당 중의원의원 시오자키 야스히사)며 핵무장 의도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8월 초] 노다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비문 앞에 서서 원폭 희생자 추모식에 참가했습니다. 노다에게 '잘못'의 의미는 전쟁이 아니라 패배이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은 '핵무장을 해서 다음 전쟁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결의인가 봅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후쿠시마의 깊은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서는 원전과 핵무장 정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이 핵발전소] 재가동은 반원전 투쟁들의 사기저하를 노리고 강행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가동 강행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대중행동이 벌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사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뒤틀어졌는지 보여 줬습니다. 원전의 이권에 폭 빠진 재계, 정부, 대학.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담하고 있는 현실, 이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방사능 확산 정보를 은폐하고, 필요 전력량을 부풀려 오이 원전을 재가동하고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생활을 위한'다며 원전의 재가동을 선언하고,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하에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분노도



(사진) 7월 16일 '사요나라 원전' 집회에 참가한 노동조합들

7월 16일 '사요나라 원전' 집회에 참가한 노동조합들. 이윤에 눈 먼 전쟁광들을 멈추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투쟁의 한복판에 나서야 한다.

현대 제국주의 전쟁은 노동자·민중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고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이 그 본질이며, 핵무기란 이런 제국주의 전쟁의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만이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매우 큼니다. 소비세 인상은 정치인들의 지진 피해나 연금 파탄에 대한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생활을 쪼은 세대가 떠받치고 있다며 세대 간 분열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총리가 아니라 정권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들이 '수국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항의행동 참가자들] 1만 2천 명을 넘었고, 22일에는 4만 5천 명, 29일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나 총리관저 앞 모든 차선을 점령했습니다. 그때의 해방감은 정말 대단했고 일본의 노동자·민중은 오랜 기간 동안 빼앗겼던 연대감을 빠르게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다시 시위 참가를 고무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7월 6일 항의 행동부터 국가 권력은 전력을 다해 시위를 탄압하기 시작했지만, 거리 점령은 이어졌고 경찰은 공안경찰을 중심으로 집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로 들지 않고 집회 장소마저 빼앗아가려는 저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동료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NAZEN은 이 멋진 행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건네며 이 운동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운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기하고 운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다 총리가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났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커다란 흐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재가동 철회나 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요구는 정부가 한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타협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중의 생각과 행동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서 노동자들의 구실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노동조합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운동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7월 16일에 열린 '사요나라 원전, 1천만 명 행동' 집회에는 17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에 노동조합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업계의 일부였던 노조 간부들이 반원전 운동의 커다란 파도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며 많은 조합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진심으로 행동에 나서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 조합원들이 활기를 되찾고, 투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전국에 투쟁을 호소하자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지역에서 국철동력차노동조합 미토지부가 피폭 노동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고, 지자체 노동자들이 급식에 사용되는 야채의 방사선량을 계속해 사용을 거부하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폭 노동자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차례차례 쓰고 버리는 데 반대해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이들이 투쟁의 한복판에 나섰을 때 우리는 모든 원전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일본인들이 대부분 우경화하고 있고 군국주의를 지지한다는 주장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경화'를 깨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국가 재정 파탄과 제국주의 간 경쟁 속에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뒤섞여서 투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을 선두로 한 계급적 운동이 중심이 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힘을 갖게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파탄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특별한 정치 경향을 갖지 않는 미조직 노동

자 민중의 깊은 분노가 총리를 차례로 끌어내리는 상황이 최근 수 년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정권도 붕괴했으며, [이 운동은] 지금부터 민중에 의한 정치가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과 핵무장 강화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지금 영토 문제를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민중들을 분리·대립시켜 전쟁을 부추기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 제국주의 전쟁은 노동자·민중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고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이 그 본질이며, 핵무기란 이런 제국주의 전쟁의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만이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핵무장 추진 배경은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공황에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시장 분할 전쟁에 참가하면서 [세계는] 환율 전쟁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격렬한 경쟁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중심 축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국채와 수출이라는 깊은 상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는 환상입니다.

실제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등 미국의 도발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항도 베트남을 방파제로 쓰려는 전략이나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미사일의 개발 등 도를 넘긴 마 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미·일·중과 오키나와의 노동자 민중의 강한 국제적 연대를 건설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전진시키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그 임무를 가진 한국의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일본에서도 필사적으로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역사를 건이 커다란 비약을 다 함께 정취합니다.

인터뷰·정리 최미선

※ 인터뷰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오다 요스케 NAZEN 사무국장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학살의 역사적 배경

해방을 바라는 꿈들이 산산히 부서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꾸준히 추적해 온 영국의 사회주의자 찰리 킴버가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 체제]에 맞선 싸움들이 어떻게 환멸로 변했는지 살펴본다.



1994년 4월 27일, 요하네스버그 근교 타운십[남아공의 흑인 거주구]에 머물던 나는 새벽 안개가 자욱히 낀 이른 아침 역사적 사건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배제됐던 흑인들이 난생 처음 투표를 하려고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남아공 전국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처럼 줄지어 서서 승리를 자축하며 Nelson Mandela 지도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투표했다. ANC는 “평화, 일자리, 자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종별로 격리하고 차별해 온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이제야말로 영원히 철폐해야 한다는 투지가 흑인 투표자들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또한 아파르트헤이트를 옹호해 온 국가 폭력도 사라져야 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의 남아공 역사는 학살 사건들로 점철돼 있었다. 1960년 샤프빌과 랑가에서, 1976년 소웨토에서, 1992년 보이파툼과 비소에서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학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국가 테러를 피해 피신해야 했고, 마을 공터와 거리는 여기저기 나뭇구는 시체들로 가득했다.

1994년에는 경찰과 그 협력자들이 시위대와 파업 노동자들을 싸우는 소름끼치는 광경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모두 믿었다. 그런데 마리카나 학살이 일어났다. 파업 노동자 최소 34명이 살해됐다. 또 다시 총을 든 경찰이 등장하고,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쓰러진 사람들이 피를 팔팔 흘리며 고통스러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사건은 전환점이 돼 아파르트헤이트 해체 이후 남아공의 현실을 생생히 드러냈다. 부자들의 지배가 계속되고 압도적 다수인 흑인들은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다.

역사

어떡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 그것을 철폐시킨 투쟁들, 18년 전의 위대한 선거일 이후 일어난 일들에 그 답이 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공포와 야만에 바탕을 둔 체제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치하에서는 선택 가능한 직업, 사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가능한 수영장 등 모든 것이 피부색을 따라 결정됐다.

인구의 14퍼센트를 차지할 뿐인 백인들만 투표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누렸다. 비백인들은 차별과 빈곤에 시달렸다.

45년 동안 남아공 어린이들은 치욕스럽게도 머리의 곱슬거림 정도와 손톱 모양을 검사받아야 했고,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사를 토대로 어린이들을 임의적으로 “인종 분류”했다.

최대 6백만 명이 “부적절한” 인종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나 먼 곳의 타운십이나 황량한 시골 지역으로 추방됐다.

사람들이 저항하면 인종사정없는 탄압이 뒤따랐다. 남아공 정부는 1948년과 1963년 사이 2천명 이상을 목베달았다. 수십만 명이 투옥됐고 수백만 명이 체포됐다.

ANC가 저항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투쟁의 대가는 혹독했다. ANC 조직원 수천 명이 정권에 맞서 저항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고문받았고 일부는 해외로 망명해야 했다. ANC의 지도자 Nelson Mandela는 27년 동안이나 투옥됐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를 순전히 악랄한 인종차별주의로만 볼 수는 없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1880년대에 다이아몬드와 금이 발견된 뒤, 백인 소유의 거대 광산 기업들은 광산의 지옥과도 같은 환경에서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흑인 인력을 필요로 했다.

광업의 발전으로 초기 흑인 노동계급이 형성됐고 이들은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끈질기고 전투적인 부문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흑인 농부들을 토지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광산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전쟁이 벌어졌고, 무자비한 벌, 노골적인 탄압, 농업의 파괴가 수반됐다.

분열

그 결과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했고, 1948년에 마침내 아파르트헤이트가 성문 화해 사회를 체계적으로 옥죄었다. 이러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외국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무너지게 아니었다. 적어도 1989년까지 남아공 주재 영국 총영사는 영국이 남아공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남아공 기업가들을 안심시켰다.

ICI, GEC, 셸, 필립스, BP, 블루 서클, 캐드버리 슈웰스는 아파르트헤이트가 강제한 낮은 임금과 인종차별적 법의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이윤을 냈다. 보수당 총리 마거릿 대처는 ANC가 “전행적인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비난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투쟁 덕에 철폐됐다.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의 핵심 골간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1973년 이래 계속된 위대한 노동자 운동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이룬 바로 그 경제적 성공이 아파르트헤이트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 다시 말해 흑인 노동계급을 낳았던 것이다.

작업장에서 거대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그러한 투쟁들이 타운십에서 벌어진 반란과 결합되자 양보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리라고 지배계급 대다수가 이해하게 됐다.

처음에 남아공 지배계급은 흑인 중간계급을 창출해 매수하려 했고 쪽쪽 “홍랜드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흑인 자치구] 지도자들을 지원했다. 그러한 정책이 실패하자 정부는 흑인 저항운동의 주류, 주로는 ANC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1994년 선거는 그 결과였다. 거의 3분의 2를 득표한 Nelson Mandela와 ANC가 정권을 쥐었다. 최고로 무자비한 정권에 맞서 싸워 온 투쟁이 1994년 선거로 거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남아공에서의 승리는 인종주의를 혐오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이기도 했다.



8월 20일 대량 학살을 규탄하는 대중 시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ANC는 어떻게 투쟁을 억눌러 왔는가

지금 남아공을 이끌고 있는 ANC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와 맞서려 하지 않았다. 외려 그들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자본주의를 바랐다.

ANC 지도자들은 사장들과 “협력 관계”를 확립해 번영을 꾀하려 했다. 그러나 자국과 해외의 협선 기업, 지주, 은행의 선의에 기댄 대가로 ANC는 대중에게 한 공약을 내팽개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1994년 선거 이전 ANC가 주도한 과도정부 시절 이미 시작했다. 패트릭 본드는 따르면, “과도정부가 맨처음 취한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한테서 차관 8억 5천만 달러를 받는 것이었다.

“주요 경제지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 차관의 비밀 요구 조건에는 전통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흔히 등장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다. 저율의 수입 관세, 공공 지출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대폭 삭감 등이 그러했다.”

집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ANC는 세계은행의 조언을 따라 더욱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장관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대책이 경제 붕괴를 막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항변했다.

ANC는 “삼자동맹”의 파트너인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공산당 지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에 그저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들은 ANC를 비판할 수는

있었지만,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토폴를 통쳐서 어떠한 체계적 저항도 일어나지 못하게 억눌렀다.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전투적인 노동계급 가운데 하나였던 남아공의 노동자들은 공산당 지도부가 ANC 정권의 방향 전환을 정당화하고 나서자 움작달작 못하게 됐다. 노조의 투사들도 파업을 고무하기보다 파업을 중지시키는 일에 연루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재앙이었다. 물론 1994년 이래 약간의 변화들도 있었다. 주택 보급이 늘었고, 더 많은 사람이 전기를 공급받게 됐고, 학교와 병원이 늘었다. 그러나 턱없이 모자랐다.

과정

한편 소수 흑인 엘리트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 가운데는 광산 노동자들의 지도자였던 시릴 라마포사 같은 과거 선동가들도 있었다. 라마포사는 여러 기업의 이사 자리를 손아귀에 넣고 치부했다. 그러나 평범한 흑인들의 소득은 1995년에서 2008년 사이 평범한 백인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반아파르트헤이트 활동가인 테스몬드 투루 대주교는 ANC 정부가 “자신들만 돈벌이 기회에 편승하고서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라고 일갈했다.

최근 UN 보고서를 보면 남아공 어린이 가운데 1백40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공급

받고 있고 1백70만 명이 판자집에서 살고 있다. 보통 이러한 판자집에는 제대로 된 창살도 없고, 주방이나 수도 시설도 없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들 탓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남아공 정부가 자본에 맞서기보다 저항을 제압하기로 했듯이 ANC도 탄압으로 돌아섰다.

그러므로 마리카나 학살은 더 광범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의 단절이 아니다. 그러나 반격 또한 계속될 것이다. 남아공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반란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파업, 타운십에서의 시위, 도로 봉쇄, 점거 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 위원장인 조엘리자마 바비는 2년 전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이미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불결한 곳에서 지내는데 흑인 엘리트와 백인들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부를 과시하고 있는 광경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 지금 과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무너트린 수만들을 당면 요구들을 정취하는 데 사용하고, 사장과 정부에 맞서서 노동계급을 단결시키고 또한 자본주의 자체에도 맞서는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17호 / 번역 정종수

학살 정부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살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장들의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학살 현장에서 광원 약 2백70여 명을 체포했고,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분노스럽게도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34명의 바로 옆에 서 있던 동료 노동자들에게 학살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다.

집합 대변인은 “총격이 일어났을 때… 광원들이 경찰을 쫓던 경찰이 광원들을 쫓던 관계없이 [현장에 있다]가 체포된 광원들은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말했다.

교도소 내 폭력도 커다란 정점이 되고 있다. 수감된 광원 중 1백94명은 경찰 유치장에서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 광원 몇 명은 너무 심하게 폭행당해 눈을 못 뜰 정도로 눈이 부어 올랐고, 두 명은 학살 현장에서 총상을 입었지만 체포 이후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사법부의 한 소식통이 언론에 알린 것에 따르면 이것은 보복 행위다. “경찰관 두 명이 집합 도중 살해당한 사진을 많은

경찰이 봤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그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공산당, 구 좌파들의 대응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끔찍할 지경이다. 전국광원노동조합은 마리카나에 경찰력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전국광원노조가 열어 준 길을 따라 들어온 경찰이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전국광원노조 지도부와 긴밀히 연결된 남아공 공산당은 경찰의 행동을 방어하고 있다.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는 마리카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제이콥 주마는 학살의 진상을 조사할 사법위원회를 발족했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학살의 주범이 경찰인대 정부가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 수천 명은 결연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학살, 파업 파괴, 작업장 복귀 협박 등 정부와 사측의 합동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이 34명을 학살한 바로 그 동산을 학살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점거했다. 그들은 월급 1만 2천5백란트(약 1백70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의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광산을 소유한 영국계 기업 ‘론민’ 경영진은 8월 27일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모두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복귀율은 겨우 13퍼센트밖에 안 됐고, 그나마도 28일에는 8퍼센트로 줄었다. 파업의 효과로 론민의 추가까지 계속 폭락하자, 사측은 결국 굴욕적으로 해고 협박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투쟁은 계속된다

다른 지역 광원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마리카나 노동자들이 동산을 재점거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로얄 바포엔 배금 광산에서는 살해된 파업(노동조합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시리아

곤경에 처한 아사드의 발악적 학살

주디스 오어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시리아 북부의 아자즈는 저항 세력이 통제하는 도시다. 뿔을 굽는 것에 서부터 알레포에서 온 난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까지 혁명위원회들이 조직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독재자 아사드가 이곳을 폭격했다. 아사드 정권이 공습을 벌인 것은 이러한 도시들을 빼앗을 지상군이 없고 오로지 활주구가 있는 공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참화를 입었다. 지역 병원은 사상자들로 넘쳐난 나머지 모든 입구를 잠그기까지 했다. 병원 당국은 물려든 사람들에게 터기 국경 가까이로 부상자들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이었다.

아자즈의 혁명위원회는 공습이 벌어진 날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분 전에 아자즈는 아사드를 지지하는 공군의 공습을 받았다. 세 발의 로켓이 도시를 강타했다. 커리어는 포연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시신들

혁명위원회의 발표로는 알레포에서 온 난민들을 마저 합하면 현재 아자즈에는 8만 5천 명이나 머물고 있다. “도시 전체가 혼들렸다.” 위원회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를 찢는 비행기의 굉음이 들렸다.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자 도시의 유리창들이 흔들렸다. 그 후 폭발음이 들렸다. 폭격을 당한 곳은 아자즈의 변화가였다. 주변 지역의 피해도 심각했고 주먹 수십 채가 전소됐다.

“미사일 때문에 땅이 크게 파였고

수십 구의 시신이 건물 잔해더미에서 이끌어 나왔다. 이걸 정말이지 학살이었다. 감옥 너머의 시가지는 완전히 파괴됐다. 사살자만 수백 명이다. 상황은 끔찍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습과 억압에도 시리아 전역에서는 최근 라마단 마지막 주간의 휴일에 아사드의 독재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대부분 모스크나 해마다 이때면 친지들의 묘소를 참배하는 공동묘지에서 열렸다.

시리아 민중의 투쟁이 이어지는 동안 아사드 정권은 휘청대고 있다. 부통령 파루크 알사라가 망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 주 전에 이미 총리가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고 요르단으로 망명해 버렸다.

영국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함무드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사드는 초토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과 공습으로 사람들을 폭격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사드가 얼마나 곤경에 빠져 있는지 드러납니다. 서방은 사태를 이용할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사드 이후의 믿을 만한 후임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저항들은 시리아 민중의 반란이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사드의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사드 이후의 믿을 만한 후임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18호 / 번역 정종석



아사드의 학살에 맞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저항 세력

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까 두려웠던 경영진은 이 노동자들의 대에 제발리 합의해 줬다. 하지만 그 주가 끝날 무렵인 24일에, 영국로 아메리칸 템פל라니 광산에서 일하는 광원 1백 명이 경도 집임을 거부했다.

점점 드러나는 끔찍한 학살의 진상과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 때문에, ANC의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당 ANC의 연대 위원회는 여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ANC에서 출당된 청년위원회의 지도자들도 대항에 모여 학살 중단, 정부로부터 마리카나로 찾아와 경찰, 대통령과 정부, 자본주의와 전국광원노조의 태도를 명명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아공 민주좌파전선은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운동의 분명한 일부다. 민주

좌파전선은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자매 조직인 ‘Keep Left’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체다.

국제적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짐바브웨에서 연대를 표하기 위해 날아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회주의자 문아라드지 구위사이는, 죽은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아직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런 연대의 확산으로 지난 22일, 2백 명이 넘는 노동자·활동가들이 요하네스버그 대학에 모여 학살 중단,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마리카나 파업지지위원회의 발족을 주장했다. 마침내 28일 밤 대중 집회에서 마리카나 연대 캠페인이 발족했고, 이 캠페인은 정부의 진상조사를 감독할 것이다.

김준호

중간 평가와 전망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온 현대차 투쟁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7월 13일 급속노조 1차 파업부터 시작한 현대차 투쟁이 이제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8월 30일 사측과 정규직지부 문용문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밤샘노동’이 폐지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2급 발암물질’인 심야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 등 온갖 고통을 겪은 노동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있다. 노동자들이 ‘3년 연속 무정의’를 뚫고 부분파업 등에 나선 것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한 아쉬운 점과 비판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합의안에서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는 사측의 압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8+8”(1조 8시간, 2조 8시간)이 아니라 일단 “8+9”를 실행하기로 했다.

인력충원도 없는 7.5퍼센트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했고, 사측이 요구한 추가 작업시간 1백48시간도 받아들였다. 임금 수준 보전을 생산물량 보전과 연동시킨 것도 우려를 사고 있다. 게다가 2조 근무자는 막바지 작업 시간에 쉴 틈도 없이 2시간 40분을 출장 일해야 한다.

현대차가 지난 몇 년째 천문학적 순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 수준도 부족하다.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순이익의 30퍼센트를 성과금으로 요구했지만 잠정 합의 결과는 16퍼센트에 그쳤다. 기본급도 15만 원 인상을 결정했는데 9만 8천 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올 초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결의한 것에 못 미친다.

이 합의 내용이 부품사 등 수많은 다른 작업장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이 때문에 8월 30일에 현대차 활동가 수십 명이 교섭장을 가로막고 잠정 합의에 반대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가 아예 빠졌다는 데 있다. ‘특별교섭’에서 계속 다룬다지만, 정규직 입단투가 마무리된 뒤에 정규직이 파업 등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협상에 사측이 진지할 리가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뿐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과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

문용문 지도부는 ‘특별교섭으로 분리’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였지만, 이는 회피성 핑계일 뿐이다. 비정규직지회 반



사진 출처: 급속노조 현대차지부

8월 16일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가 참가한 집회. 정규직에게도 불만족스럽고, 불법파견 문제도 떼어 낸 합의안을 넘어서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

발의 핵심은 정규직 노조가 본교섭에서 사측의 “선별적 신규채용과 공정분리”라는 ‘쓰레기안’을 받지 말라는 데 있었다.

그런데 문용문 지도부는 비정규직지회에게 ‘쓰레기안’을 받으라는 부적절한 압박을 넣다가, 반발이 심하자 이제는 아예 비정규직의 요구를 떼어 내서 정규직의 연대 의무를 외면하려 한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요구로 함께 투쟁해 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한 열망에 등을 돌린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투사들은 8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특별교섭으로 분리시키자’는 문용문 지도부의 안건을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문용문 지도부의 시도가 좌절됐는데도 문용문 지도부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만에 불충분한 내용의 잠정 합의로 정규직 입단투를 끝내 버리고, 불법파견은 특별교섭에서 다루기로 합의해 버린 것이다.

현대차 투쟁은 밤샘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에 신음해 온 수백만 명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8월 파업 계획에서도 현대차 노조의 구실이 중요했다. 투쟁의 역사 속에서 다져진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민주노조 운동의 선도 부대로서 해야 할 구실이 있었던 것이다.

외면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규직 요구 성취에서도 부족하고, 불법파견 문제도 떼어 낸 이번 잠정 합의안은 부결되는 것이 맞다.

사실, 문용문 지도부는 이번 투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철저히 부분 파업 중심으로 힘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현대차 사측은 파업 손실액이 1조 5천9백44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자동차 재고도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힘을 모두 발휘했다면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지도부는 전면파업을 주저했고 사측은 숨들릴 틈을 얻을 수 있었다.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

질하며 투쟁을 약화시키려 했다. 쟁의기간 직전에는 대규모 직영 단기 계약직을 도입해 불법파견 회피 꿈을 부렸고, 본교섭에서는 불법파견을 무시하는 ‘쓰레기안’을 내놔다. 그러나 문용문 지도부는 이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기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수용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기나 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문용문 지도부가 본교섭에서 부적절한 타협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정규직 입단투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분리를 수용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기층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건설한다는 핵심 과제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이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근래 “투



사진 출처: 급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현대차 활동가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이 최우선이다.

정규직 노동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인가

8월 27일치 〈한겨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며 그 대안으로 “내적 유연성 확보”, 즉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화를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유연성’을 바라는 자본과 고용 안전판을 원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답합의 결과라는 혼란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흔히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 통제, 혹은 배신 등 보수적 태도를 취하곤 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실제, 올해 현대차 투쟁에서 문용문 지도부는 회사가 내놓은 “쓰레기”안을 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보수적인 태도는 분명 문제인데, 그렇다고 현상이 곧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사용을 원하는 것은 분명히, 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이다.” (장귀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 《비정규직없는 세상》)

현대차만 보더라도 사측은 해고를 쉽게해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부추겨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민주노조를 약화

시키려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2005년 현대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2.4퍼센트가 “나도 언젠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 유연화와 노동자 분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것이다.

현상과 본질

결국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을 통해 이득을 얻은 것은 자본이지, 결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 반면 비정규직 확대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는 견해는 정규직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른바 ‘특권’을 포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파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이런 견해를 들이밀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노동운동 내 온건파들도 “사회연대전략”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주장했다.

〈한겨레〉기사의 결론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유연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잘 조직돼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양보하고 후퇴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실제 1998년 현대차 대규모 정리해고와

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며 혼란을 자아낸 것도 안타깝다. 물론,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과 투쟁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였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치 않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와 대의명분을 흐리는 효과만 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집력이 약화된 원인과 책임은 비정규직과의 단결 투쟁을 소홀히하고 외면한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태도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기층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하려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존재했다. 울산 1공장의 전투적 정규직 대의원들은 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원했다. 문용문 지도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떼어 내려 한 대의원대회에서도 전투적인 정규직 대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사측의 ‘쓰레기안’ 폐기를 위한 선언 운동에 며칠 만에 정규직 활동가 1백여명과 조합원 5백여 명이 동참한 것도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런 가능성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고 힘을 키워야 한다.

물론, 이번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문용문 지도부는 다시 파업을 재개하기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적당한 수준에서 입단투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현재, 이런 정규직지부 지도부를 강제하거나 뛰어넘을 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와 자신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 듯하다.

하지만, 투쟁이 최종 끝나지는 않았다.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이 주간연속2교대에서도 너무 미흡하고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임금, 노동강도 문제 등에서 계속해서 “노시간 마찰이 불가피”(〈매일노동뉴스〉)한 상황이다.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투사들은 기층에서 단결 투쟁을 건설하며 전진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쟁을 돌아보면, 노조 지도부가 싸울 땐 힘껏 투쟁을 밀고 나가고, 그들이 회피할 때 대체해서 싸울 수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조직이 절실하다는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이런 현장노동자들의 네트워크는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을성 있게 이런 네트워크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직 건설에는 부문을 뛰어 넘어 투쟁하려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작업장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년

마침내 기지개를 켜 노동계급의 힘과 전투성

1987년 8월 6일 현대중공업에 회장 정주영이 나타났다. 7월 울산 현대그룹 공장들에서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왕희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주영이 관리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고 있던 회사 체육관에 몰려가 답판을 요구했다. 위력에 눌린 정주영은 노동자 2만여 명이 모인 운동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어느 노동자가 정주영에게 흠을 뿌렸다. 정주영이 입버릇처럼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분노와 투지가 전국 곳곳에서 분출된 이 해 여름, 현대그룹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군부 독재의 공장 버전인 군대식 현장 통제가 무너졌다. 이 석 달 동안에만 민주노조 1천여 개가 새로 탄생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더는 천대받는 ‘공돌이·공순이’가 아니었다. 관리자들에게 욕을 먹고도 꺾소리 못 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더는 출근 때마다 정문에서 복장과 두발 검사를 받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일을 겪지 않게 됐다. 더는 점심 때 회사가 준 ‘쥐똥이 까만 콩처럼 섞여 있는 도시락’을 억지로 먹지 않게 됐다.

이제 파업과 쟁의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 결과, 그 해 가을에 노조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등의 노동법 개정을 쟁취했다. 이후 3년 동안 매년 10~30퍼센트에 이르는 임금 인상을 따냈다.

‘쥐똥’

사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독재정권과 기업주들이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짠 대가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군대식 현장 통제, 사회적 천대가 이른바 ‘경제 기적의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몫이었다.

독재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이런 억압 덕분에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자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 현대 노동자 계급은 발전한다. …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노동자 계급)들을 생산한다.”

독재정권과 기업주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쥐어짚지만, 그 성장은 더 많은 노동계급을 만들어냈고 도시로, 더 큰 공장으로 밀집시켰다. 박정희 정권 초기만 해도 7백만 명 수준이던 임금 노동자는 1980년대 중반에 1천5백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경제 기적’은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거인인 노동계급도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87년부터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설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됐다.

1987년의 민주화 항쟁이 4·19혁명이나 1980년 ‘민주화의 봄’처럼 군부의 반동으로 역풍을 맞지 않은 것은 마침내 이 거인이 기지개를 켜기 때문이다.

사실 연초부터 6월까지 벌어진 항쟁은 자유주의 야당과 전투적 학생운동, 그리고 여러 사회 집단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투쟁이었다. 당시 6월 항쟁 지도부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단에 노동운동 지도자는 5퍼센트도 안 됐다.

1985년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탄압 정책 탓에 노동운동이 위축된 탓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항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났다.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지적했듯이, 군부 독재를 패퇴시키며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를 진전시킨 6월 항쟁(정치투쟁)은 노동 대중이 폭넓게 작업장 민주화를 위한 투쟁(경제투쟁)에 나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남겼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이 한 발 물러서자,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6월 항쟁에 개별적으로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거리의 민주화를 작업장에서 실현하려고 했다. 반면, 6월 항쟁의 일부였던 자유주의 야당들은 노동자 대투쟁과 거리를 뒀다.

군부 독재 아래서도 조금씩 운동과 의식을 발전시켜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일회성 투쟁이 아니라 자주적 노동조합 건설로 해결하려 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민주노조 건설 염원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게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 … 그렇게 하면서 나도 노동자라는, 나도 인간이라는 선언을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



1987년 대투쟁 당시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이 깨어났다.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87년체제'라는 한국사회의 전환점을 만든 진정한 동력이었다.

진에서 민주노조가 결성된 일이었다. 무노조 왕국을 선포했던 현대에서 무노조 방벽이 뚫리자, 이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로 민주노조 결성과 투쟁이 순식간에 퍼져 갔다.

민주노조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 결성을 방해하자, 울산 현대 노동자들은 8월 17일과 18일 연대 파업을 하고 울산 일대를 휘젓는 거대한 행진에 나섰다.

샌드머신 등 중장비를 앞세우고 가족까지 동반한 6만여 명의 행진 앞에서 전투경찰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억눌린 불만이 터지자 노동자들의 전투성은 견잡을 수 없이 발전했다. 7~9월 동안 하루 평균 30건 넘게 파업이 발생했다. 이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쟁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또 다른 통계로는 1961년 이후 모든 쟁의를 더한 것보다 많다.

울산 현대그룹의 민주노조 결성을 주도했던 지도자 권용목마저 “조합원들이 통제를 벗어날까 봐 두렵다”고 해야 했을 정도였다.

위낙 억압적 조건이라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작업장 농성과 파업, 경찰

과의 거리 전투 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투쟁의 전형적 양상은 “선 파업 후교섭”이 됐다. 이처럼 노동자 대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전투성, 자기 조직화 역량이었다.

대투쟁을 거치며 대기업 제조업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력으로 부상했다.

노동쟁의 참가자의 81퍼센트인 99만 명이 제조업 노동자였다.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쟁의의 90퍼센트가 제조업 부문이었다. 노동운동의 전통이 있던 수도권이 아니라 울산에서 시작해 부산, 마산, 창원, 거제 등 경남의 제조업 공단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했다.

정권은 8월 하순부터 강경 탄압 기조로 돌아섰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은 이제 막 잠을 깨 경험이 부족한 탓에 국가 탄압에 맞서 전국적 조직이나 연대 파업을 곧바로 건설하지 못했다. 대투쟁은 9월 중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는 컸다. 그해 6월에도 군대를 출동시키려다 포기한 전두환 군사 정권은 결국 7~9월의 노동자 투쟁 물결을 보며 반동을 포기

한다. 대투쟁이 만들어낸 민주노조운동은 절차적 민주화를 되돌리기 힘들게 만든 진보 운동의 강력한 진지가 됐다.

투쟁의 교훈에서 잘 배운 노동운동은 터디지만, 전진을 계속했다. 이후 2년 만에 노동조합 5천여 곳이 새로 만들어졌고, 90만 명이 새로 노동조합원이 됐다. 전노협 등을 거쳐 1995년에 민주노총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1996년 말에서 이듬해로 이어진 노동악법·안기부법 반대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2004년에는 의회 진출에도 성공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 정부와 기업주들의 반동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운동이 25년 전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억압적 조건에서도 단결해 싸우는 것이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전투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계급 대중(파업)투쟁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필요한 것은 전국적 계급 정치였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 이런 계급의 기억에서 교훈을 배우며 당면 투쟁에서 정치적 과제를 끌어내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와 조직 건설은 너무나 중요하다.

김문성

노조 상근 간부층은 왜 소심하게 타협하려 하는가

적지 않은 이들이 현대차 노조에서 친사측 우파였던 전임 이경훈 지도부를 비판하며 등장한 문용문 집행부의 일방적인 노사 합의를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올해 정부와 사장들이 전국적 규모에서 만도, 에스제이엠 등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시켜 왔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부문적 시야에 갇혀 연대를 강력하게 건설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파업 기간에 단독으로 타결을 선언해 버렸다.

왜 노동조합 지도부만 되면, 기대에 못 미치는 타협을 하려 할까. 이를 이해하려면 ‘노동조합 관료주의’라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기업주와 정부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동조건 등을

지키려고 만든 무기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지키려는 기구라서,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을 놓고 투쟁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런 노동조합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전투적인 노조 투사라도 노조 상근 간부가 되면 노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중재와 화해를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사측과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조합원에 대한 통제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투쟁은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골치아픈 일로 여기게 된다.

노조 상근 간부들의 소심함은 투쟁의 판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 간 충돌이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더 두드러진

다. 중재자로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자들의 보수적 습성은 그가 수행하는 구실과 사회적 위치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회적 위치

이처럼 협상을 우선하는 태도가 현대차 노조 지도부로 하여금 불필요한 타협을 반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주간연속2교대제 두 쟁점 모두에서 현대차 사측이 매우 완강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는 사측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투쟁을 조직해 참여해 충돌을 감수하든지, 어떻게든 타협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압력에 처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한계에서 비롯하는 이런

노동조합 관료주의 특성은 상층 지도자들의 시야를 자신이 속한 작업장의 경제적 문제들로 가두게 하는 데도 일조한다.

물론 노조 지도자들은 기층의 투쟁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선출되는 자신의 위치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자라는 본연의 위치를 위협받지 않을 수준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더 전투적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이런 반복되는 낭패감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올해 문용문 집행부가 바로 우파적인 이경훈 집행부를 대체한 민주파 아니었던가. 이경훈 집행부도 전투적 현장파인 윤해모 집행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타협을 하다가 사퇴한 결과로 선출됐던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 안에서 진정한 구분은 현장조합원과 노조 지도부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기층을 올바르게 대변할 때 지지하며 함께 싸우고,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으면 현장 조합원의 독자 행동을 건설하는 것이 올바른 지침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기층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과 전투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 위기 시대에 올바른 정치적 관점으로 현장조합원들 사이에서 각종 지배이데올로기와 부문주의에 맞서 싸우며 조직하고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노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다.

김문성



《의자놀이》

서평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공지영 지음 | 휴머니스트 | 2백8쪽 | 1만 2천 원

지난 8월 28일 박근혜가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에 가서 꽃을 헌정하려 했을 때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박근혜의 경호원에게 먹살이 잡혀 끌려 나갔다. 꽃의 주인공은 살아 있는 전태일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살아 있는 전태일에게는 멸시, 냉소 그리고 먹살잡이를 헌정했다.

보수 언론들은 계거품을 몰며 박근혜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이들 때문에 휘방받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의자놀이》는 묻는다. “누가 의자놀이를 시켰고, 거기서 탈락한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바짝바짝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정리해고에 대한 소문들이 유명처럼 떠돌 때 그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바짝바짝 목이 탔을 것이다.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쏟아 부은 최루액 2천 41.9리터는 노동자들의 몸을 타들어가게 했다. 경찰이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서 노동자들은 공업용수와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먹었다.

목마름

의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제발 물만이라도 들여보내 달라!”고 호소하자 사측은 “물 먹고 싶으면 나와서 먹어라” 하고 말했다. 77일 동안 아속하게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책은 쌍용차 투쟁을 정부가 어떻게 탄



더 적은 의자만 내놓고 우리를 경쟁시키는 체제에 맞서 단결이라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압했는지 목이 바짝 타들어갈 정도로 묘사했다. 그 목마름 속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단단하게 서로 소박하게 믿으며 싸웠는지도 눈시울이 촉촉하게 기록돼 있다.

또한 자신들의 이윤과 기술 유출 등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앞

에 의자를 가져다 놓을 작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도 폭로하고 있다. 쌍용차 사측과 정부, 경찰, 법원, 회계법인, 보수 언론 등이 서로 긴밀히 공조해 사기를 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음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는지, 당시 쌍용차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먹튀’와 회계조작에 법이 얼마나 관대했는지 등을 보면 진정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온갖 사기극으로 얼룩진 해고였지만, 심지어 회계조작이 없었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자들은 정말 일한 죄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도 없게 돼 있다. 사측의 해고는 “경영은 우리가 맡아먹었으나 고통은 너네가 당해라” 하는 고통전가다. 설사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국가가 회사를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쌍용차의 경우에도 국가가 쌍용차 기업주들에게 퍼 준 돈으로도 국유화가 가능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 더 크게는 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의자놀이를 시키면서 굴러 왔다. 이들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하나의 공장에서만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더 적은 의자만 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서로 물어 뜯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자놀이를 거부하는 선택지도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후원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한 것도 그 선택지를 택하자는 외침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투쟁에 대한 더 많은 지지가 모아져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의자놀이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양효영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잘 정리된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과 분석



데이비드 하비 지음 | 이강국 옮김 | 창비 | 4백23쪽 | 2만 8천 원 |

조니 존스 영국 반자본주의 개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부편집자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이자 사회이론가 데이비드 하비는 최근 좌파 가운데 매우 각광받는 인물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고 급진화되고 있는 많은 청년 지식인들은 하비를 중심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접하고 있다.

그는 학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리학자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온라인 강의는 방문 횟수가 백만 번이 넘고 책《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창비)으로도 출판돼 호평을 받고 있다. 잇따라 《자본이라는 수수께끼》가 출판됐다. 다루는 규모와 범위가 엄청나게 매우 큰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하비의 평생의 작업을 엄밀하지만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책은 성공을 거뒀다.

이 책은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해부로 시작한다. 하비는 경제 위기가 1990년대를 통해 미국 등의 지역에서 발생했던 부채 누적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는 장기 호황 이후 하락한 이윤율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즉,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부의 몫을 공격해 수익성을 회복시키려 했다. 이것은 소비가 부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성

하비는 자본주의에서 왜 위기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발전했는지를 살핀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문구를 인용하며 끝낸다.

하비의 분석은 많은 장점들이 있다. 공

간 영역을 자본주의와 결합시키는 시도(1982년 발행된 그의 고전적 저작인 《자본의 한계》에서 끌어 왔다)와 환경에 의해 제약받는 자본 축적에 대한 논의는 빛나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실망스럽다. 위기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은 상쇄 경향들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사소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격하된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논의는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율게도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부상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변혁 정치조직에 관한 흔한 부정적 편견들을 반복한다. 하비는 사회 변혁에 대한 유토피아적 견해로 자주 기운다. 그의 주장은 마르크스가 강조한 계급중심성이 아니라 마이클 하트나 안토니오 네그리의 ‘다중’ 개념과 공통

점이 더 많다.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를 읽으며 책의 구조와 주제들이 크리스 하먼의 유작 《좀비자본주의》와 매우 비슷해 놀랐다. 하비의 책은 흥미롭고 또 활동가들이 읽기도 쉽지만 이 책의 많은 약점을 교정하는 하먼의 책을 함께 읽을 것을 권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0년 5월호 / 번역 최용찬



이윤율 저하 경향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에 비해 거둔 이윤율의 비율이 이윤율이다. 일반적으로 이윤율이 높으면 투자가 활발해서 실물 경기가 활발하고, 이윤율이 낮으면 침체하기 쉽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 간의 경쟁 때문에 기계 등 생산수단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위헌 소송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이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자들을 고발하면서 반낙태 캠페인을 벌이자, 일부 남성 등이 낙태한 여성에게 협박,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낙태를 불법화하면 여성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가와 타인의 통제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헌법재판소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고, 여성에게 온전히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무엇보다 출산은 여성의 삶과 직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포기하라는 말일 뿐이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낙태를 금지한 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낙태를 선택해 왔다. 결국, 낙태를 처벌하면 낙태를 음성화해 여성들이 더 위험하고 불안한 조건에서 낙태를 하도록 내몰 뿐이다.

2010년 초에도 낙태단속 캠페인 속에서 낙태비가 치솟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생명 존중’ 운운하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낙태 처벌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보지 않는다.

한편, 최근 식약청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사후피임약이 낙태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

는 우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3일 안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의사 처방을 받도록 절차를 번거롭게 하면 시기를 놓쳐 이 피임법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공문구가 되지 않으려면 낙태를 합법화하고, 사후피임약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미진

무인전투기 — 마우스 클릭으로 민간인 학살하기

서방 열강들은 자신들이 시리아에서 아사드가 벌이는 학살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아랍 민중을 학살하는 것은 서방 열강 자신도 해 온 일이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군은 무인전투기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무인전투기들은 “악당들”만 죽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국 사회주의자 시안 러덕은 진실은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무인전투기에는 조종사가 없다. 이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앉아 무인전투기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비추는 화면을 보며 조이스틱을 조작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폭격과 정찰 임무 수행의 주된 수단으로 끊임없이 이 무인전투기들을 이용해 왔다.

오바마 정부가 파키스탄에서 벌인 첫 무인전투기 폭격은 오바마 취임 3일 뒤인 2009년 1월 23일에 이뤄졌다. 미사일들은 말리크 굴리스탄 칸의 집에 떨어졌고, 그의 가족 다섯 명이 죽었다. 말리크의 18살 난 아들 아드난은 “아버지와 세 명의 형제, 그리고 사촌을 잃었다” 하고 말했다.

오바마는 총 2백78건이 넘는 무인전투기 공습을 지휘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끝 모를 전쟁에 대한 대중의 터질 듯한 불만에 대한 대응이다. 병사들의 죽음과 부상은 이미 형편없는 전쟁의 인기를 훨씬 더 떨어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무인전투기에 관한 선전의 바탕을 이루는 한 가지는 무인전투기들이 정밀하다는 것이다. 무인전투기의 열성 지지자들은 무인전투기가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만 죽인다고 주장한다. 병사와 민간인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무기라는 얘기다.

비극

그러나 연이은 비극은 이런 거짓말과 상반된다.

올해 6월 4일 와지리스탄 북부 파키스탄의 하슈켈 마을에서 미군 무인전투기가 사용된 가장 격렬했던 공습들 중 하나가 벌어져 16명이 죽고 다른 부상자들이 나왔다. 무인전투기가 미사일 두 기를 발사해 마을에 있던 가옥 한 채를 폭격했다. 그곳에 있던 6명이 죽고 다른 5명이 다쳤다.

한 부족민은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마을 주민들이 폭격 장소로 달려가 시신을 수습하고 가옥 잔해 속에서 부상자들을 끌어내는 등 구호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무인전투기가 미사일 두 발을 더 쏘고



무인전투기 프레데터의 원격 조종실 무인전투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열 명이 더 죽었다.”

무인전투기의 사용이 가장 활발한 곳은 파키스탄 영토 안인데, 이곳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의 알카에다 전투원들(미국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2004년 이래 파키스탄 내에서 벌어진 3백30회의 무인전투기 공습으로 적어도 2천5백 명이 사망했다. 믿을 만한 보고들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적어도 4백82명은 민간인이었다. 서방 군대들이 전투 가능 연령대의 남성들은 절대 민간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공습을 다룬 보고서들을 보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2009년 6월 23일 CIA는 수천 명이 참석한 장례 행사를 공격했는데, 탈레반 고위급 사령관을 살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사망자 83명 가운데 18~45명가량이 민간인이었다.

처음에 파키스탄 정부는 암묵적으로 공습을 지지했고, 국경 인접 지역에서 테러리즘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분노 때문에 정부는 공습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은 무인전투기 공습으로 인한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까지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런 공격의 대상에는 촌락, 사원, 장례식, 결혼식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6월 3일 한 무인전투기 공습은 앞선 공습으로 살해된 희생자들의 장례

식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원래 목표로 삼았던 탈레반 대원들은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명가량이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5월에는 한 사원도 공격을 받았고 적어도 예배자 3명이 죽었다.

비행장

작전을 주도하는 것은 CIA고, 이 작전에 따라 멀리 떨어진 삼시 비행장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한다. 이 비행장은 파키스탄 영토 내에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고작 50킬로미터 거리다. 바로 이곳에서 무인전투기들이 점검과 보수를 받으며 살인 임무에 파견된다.

파키스탄 내 미군 무인전투기 공습은 2004년의 연 1회 수준에서 오바마 정부 동안 4일에 한 번 꼴로 늘어났다. 게다가 무인전투기의 활용은 파키스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6월 9일, 미군 무인전투기 한 대가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로가르를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결혼 피로연을 위해 모여 있던 18세 여성,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와 똑같은 참사들이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점령한 뒤로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군부대의 야간 습격과 짝을 이룬 무인전투기 공격은 치명적이다. 미국은 2014년 말로 예정된 철군을 앞두고 이처럼 무인전투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인전투기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UN은 수백 명은 죽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인전투기들도 국가가 저지르는 원격 살인의 오랜 역사의 일부다. 소형화기의 첫 개발부터, 제1차세계대전 동안 비행기들이 투하한 폭탄들을 거쳐 순항 미

사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전쟁 행위들 을 “깨끗하기 만들기” 위해 사용돼 왔다.

공중 폭격은 게르니카와 드레스덴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대중을 겁먹게 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무인폭격기는 이처럼 오래되고 잔혹한 야만주의 전통의 최신 버전이다.

죽음의 신' 기업들은 폐돈을 벌고 있다

무인전투기들은 동시에 막대한 수익의 원천이다. 44개국에서 무인전투기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군수업체들이 이 신흥 시장에 달려들고 있다.

‘제너럴아토믹’은 미군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사의 무인전투기를 위한 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5천5백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

그러나 무인전투기 사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의 전체 규모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무인전투기 한 대는 대전차공격용 헬파이어미사일 14기를 탑재한다. 미사일 한 기의 무게는 43킬로그램이고 가격은 4만 3천 파운드다. 그리고 작은 건물 안의 사람들을 쉽게 몰살시킬 수 있다.

무인전투기가 갖는 매력의 일부는 이들이 (일반) 전폭기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데 있다.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2백만 파운드가 넘을 수 있는 반면 무인전투기 한 대의 가격은 25만 파운드 수준이다.

각 무인전투기는 지상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사람들의 위치를 알려줄 열 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무인전투기 공습으로 죽었을까? 미국은 계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이제껏 어떤 정보도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9호 / 번역 김용민

반교육적인 학교생활기록 지침 철회하라

교과부가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더니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강원과 경기, 전북교육청 지역의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생기부 기재를 거부한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 교육청 세 곳이 내린 생기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 공문을 직권취소했고 보복성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학교폭력의 기록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돼 학생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중간 삭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런 최소한의 권고

조차 수용하지 않고 일선 교사들의 반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지금과 흡사한 방안을 발표됐다가 일선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무려 17년 전에도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점 때문에 백지화된 계획을 재현하고,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묵살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다.

백지화

교과부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 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적도록 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를 해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황당한 이야기다.

학교폭력 내용이 입력된 생기부는 졸업도 하기 전부터 수시 등 입시에 쓰인다. 때문에 그 기록 연한이 몇 년이건 학생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 옆에 긍정적인 내용을 함께 적는다고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사라지리라는 것은 몽상이다. 결국 어떻게 해도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명백한 이중 처벌이다.

또한 학생들을 징계와 처벌로 교육한다는 발상 자체가 낡은데다, 징계와 처벌 위주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학교폭력의 복잡화와 음성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 지침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전교조는 매우 바람직하게도 지난 4월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지침 폐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제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라는 교과부 지침에 “교사의 양심으로 불복종할 것을 천명”한 바있다. 또 지난 달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생기부 기재 거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2학기 시작부터 고3학생들의 수시 입시가 진행되고 있고, 2학기 내내 전체 학생들의 생기부가 입력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교조가 지난 4월의 선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실질적인 교과부 지침거부 운동 건설로 실천해야 할 때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

교폭력 생기부 입력을 자신감 있게 거부할 수 있도록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한 교사의 징계를 조직적으로 방어할 것임을 널리 밝혀야 한다.

한편 진보 교육감 지역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지침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강원, 경기, 전북 세 지역의 교육청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 중 전남 교육청과 서울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그대로 하달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광주 교육청은 고3 입시생에 한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도록 했다. 전남과 서울, 광주 교육감은 조속히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 지침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경기 시흥지회 조합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9월 12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학교비정규직

단결과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학비노동자들은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전북·전남교육청과도 교섭을 앞두고 있다.

그 첫 성과로 9월 1일부터 강원과 광주에서 각각 5천7백13명과 2천8백55명의 학비노동자들이 교육감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정년을 보장받는다.

한편, 학비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박으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을 9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예산 마련 방안 등 추이를 보아야하지만, ‘교육감 직접 고용·호봉제 도입·전직종 무기계약제’와 같은 주된 요구를 포함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2천여 명이 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런 성과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강요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만을 결집시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학비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은 지난해 12월에 교과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고, 올해 9월부터 가족 수당·교통비·자녀 학비 보조 수당·장기 근무 수당 등 4개 복지 수당이 지급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낸 바 있다. 신생 노동조합이지만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고 전망을 분명히 한 덕분에 전체 15만 학비노동자들 중 3만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직접 행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기도 매우 뜨겁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학비노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은 노동자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며 전체 노동계급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특히, MB정권 하에서 일제고사, 시국선언, 국정원 조사 등으로 탄압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비노동자들을 통해 투쟁의 전망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



단결투쟁으로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철통같이 버티던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파업이라는 직격탄을 날려 요구안을 쟁취하고, MB를 배출한 교고의 민간업체 급식위탁에 반대해 투쟁으로 위탁을 철회시킨 사례는 보수교육감과 MB정부 하에서 고통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의 답답한 속을 뽐내 주었다.

견인차

그러나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는 충남 등 10개 교육청의 횡포와 이를 부추기는 교과부의 역지에 맞선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비노동자들은 각 교육청과 교과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경 파업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은,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청과 교과부 등 전교조와 동일한 대상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교조 서울·경기·인천지부는 지

난 6월 23일에 열린 학비 집회를 전후로 성명서를 발표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을 밝히며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그리고 이에 화답해 학비노동자들도 일제고사 반대 투쟁에 함께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보복특별감사 규탄 기자회견’ 등에 참가하며 전교조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27일(토)에 ‘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교육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중앙과 지역차원의 교육연대를 구성하여 서로의 요구를 반영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그동안 같은 학교 안에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었던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굳건한 연대를 건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령’이기를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움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조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쌍용차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9월 20일(금)과 24일(일) 양일간 ‘쌍용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여 일을 넘긴 쌍용차 노동자들의 ‘풍찬노숙’ 투쟁과 더한층 넓어진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낳은 성과다.

최근 출간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면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부각됐다. 책의 인세와 수익금은 쌍용차 노동자 투쟁기금으로 전액 후원되기도 한다. ‘북 콘서트’에는 들국화 등 대중 예술인들이 참가해 지지와 연대를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5대 종단(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이 평택에서 서울까지 ‘1백 일 도보 순례’를 할 예정이다. 조계종에서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해 쌍용차 투쟁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친기업 정당답게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며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버텨 왔다.

이에 항의하며 지난 8일부터 쌍용차 노동자들이 새누리당사와 박근혜 캠프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면담 조차 거

부하며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았다. 분향소 설치조차 뒷받쳤다. 경찰은 신고된 그늘막조차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을 연행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바로 앞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탄압하면서 전태일 재단 방문과 전태일 동상 헌화라는 ‘쇼’를 벌이는 박근혜를 가로막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매우 당연하고 정당하다.

몰려서지 않는 노동자들의 투지 앞에 박근혜의 ‘1백퍼센트 국민 대통합’이라는 기만적 행보는 더 옹색해졌다. 박근혜는 자신의 선거 캠프조차 경찰에 의존해 물레 드나들어야 했다.

바로 이런 사회적 압력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려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여야 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청문회와 더불어 국정조사 실시와 쌍용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급속노조는 쌍용차 법대위가 요청하듯 전국노동자대회(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연대와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차 비정규직

“세상 모든 비정규직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8월 24일 집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대회 가족대책위 화** 씨가 한 연설을 축약한 것이다.

저희는 2010년 비정규직 점거파업 이후 해고자 가족이 됐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저희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해고로 금전적으로 가정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부 싸움도 잦아지며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근히 버티는 우리에게 현

대차 사측은 다시 한 번 돌을 던졌습니 다. 2015년까지 신규 채용 3천 명? 도 저지 받아들이 수 없는 안을 들고 우리를 희유하고 협박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규채용이며, 누구를 위한 3천명입니까? 그동안 힘들게 싸워 온 우리 남편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어느 분이 “질긴 놈이 이긴다” 하는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투쟁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세상에는 우리가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 남편! 힘내라, 비정규직!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서 내려 계단을 기어 내려가고 ... 10시간이 넘는 싸움 끝에 역사에 진입해 농성장을 꾸릴 수 있었다.

C학생은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중북 장애인 학생이다. 1급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C는 2011년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으면서 2급 장애인이 됐다.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고 교사, 치료사,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강한 이의신청 후에 1급 장애인이 될 수 있었다.

P학생은 2급 자폐성 장애인 학생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표현이 미숙해 자기 공격 행동 또는 타인 공격 행동이 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 가정에서 P의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급 장애로 상향조정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해드렸다. 그러나 학부모는 1급이라는 낙인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고 여전히 가정에서 온전히 그 부담을 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32조 장애인 등록 조항은 관련 항목으로 장애 등급 심사규정을 두고 등급을 세분화하고 있다. 등급 심사규정을 통해 장애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는데 이는 복지정책을 위한 일방적 구분일 뿐 장애 당사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오히려 등급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장애인을 걸러내겠다는 이유로 강화된 등급 심사규정으로 인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진행

한 등급심사결과 36.7퍼센트의 등급이 하향조정 됐고 이 과정에서 받고 있던 복지 서비스마저 중단된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비극

2010년 10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11살 장애아들을 둔 가난한 아버지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조항으로 인해 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죽을 테니 아들을 돌봐 달라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선택했다.

지난 8월 7일에는 거제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던 사위가 시급 5천 원~6천 원의 조선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해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가 음독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많은 성

인 장애인들이 소득이 있는 부모·형제·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가족에게 또 하나의 짐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급권을 따기 위해 부양의무자에게 찾아가 부양의무 기피서를 받아 제출하는 치욕스러운 일도 겪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항을 넣어 교묘하게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박근혜는 부양의무제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자 부양의무제 폐지만을 이야기했다가 슬그머니 무응답으로 돌아섰다. 박근혜가 말하는 복지국가에는 장애인과 빈곤층은 없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발의했으나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

자의 범위 축소에 머무르고 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당사자의 요구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장애인 연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백 만 서명운동, 거리 퍼포먼스, 10만 인 염서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고, 빈곤의 사슬을 끊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연대가 중요하다. 투쟁을 통해서만이 보다 선명한 개혁적 요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장애해방과 빈곤해방을 위해서는 인간보다 이윤과 효용성이 우선인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김미연 당중추동학교 특수 교사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9월 12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지금 삼척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삼척시장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척시장이 일부 공무원과 관련 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반투위)는 “2010년 시장이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주민투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김대수 시장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되자 그동안 핵발전소 유치를 주장해 온 단체들과 삼척시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온 단체들은 주민소환 청구 서명 철회 신청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배포했다.

삼척시장 김대수는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며 “깨끗하게 도려내 다시는 발붙일 수 없고

록 적극 나서 달라”는 편지를 각계에 보냈고 시청 내부 메일로 주민소환 서명 철회 양식을 배포해 매일 실적을 보고하게 했다. 양심에 따라 소환 운동에 동참하려는 공무원 가족을 압박하기도 하고, 시장의 처는 공무원 가족들을 동원해 서명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협박과 방해 속에서도 삼척시 지역 인사 2백1명이 핵 반대 선언을 했고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 1백7명도 “헌법적 행복 추구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라며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소환 운동은 한 달여 만에 주민소환 청구요건 8천9백82명을 한참 웃도는 1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핵을 반대하고, 진정한 ‘암적인 존재’인 김대수 시장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 줬다.

선관위에 서명부를 접수하자 김대수 시장 측은 일부 공무원과 가족들을 동원해 서명부를 열람한다며 명단을 빼끼고, 서명자를 찾아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

는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다녔다. 건설업자들에게는 사실확인서를 5명에게 받아 오면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건설업자가 서명한 경우 즉시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공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급기야 8월 11일 6천4백75건이 대필, 동일필적, 허위기재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핵반투위는 주민소환 운동에 대한 김대수의 황당한 거짓말과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999년 삼척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와 2005년 원덕읍 이천지구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 삼척 주민들은 단호한 투쟁으로 이 시도들을 백지화시킨 자랑스러운 승리의 경험이 있다.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반핵투위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신미정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덕성여자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의 분열 시도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인 8월 29일, 소중한 승리를 이뤄냈다.

그동안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익대 등 청소노동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유명이 아니다”며 벌여 온 투쟁에 동참해 힘차게 싸워 왔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동덕여대와외의 공동교섭을 통해 시급 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덕성여대 당국은 청소노동자들에게만 시급을 인상하겠다고 그동안 학교에서 묵묵히 일해 온 보안·시설·버스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하지 않겠다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심지어 덕성여대 당국은 울여름 폭염 속에서도 휴가 한 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묵묵히 일한 경비 노동자들과, 시설·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지난해 체결한 단협조차 적용하지 않으려 했다.

덕성여대 분회는 학교 당국이 비정규직



이날(8월29일)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소노동자들과 보안·시설·학내 버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에 맞서 단호하게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학교 당국은 직종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급 인상과 단협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안에서도 시설과 경비 노동자들을 나눠 더 많은 차별을 강요하겠다는 학교 측의 아비한 이간질과 분열 지배 시도에 맞서 이뤄낸 통쾌한 승리다.

강이주

독자토론광장

9월 12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면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영화 〈토탈리콜〉을 보고

자본주의를 리콜하자

최근 개봉한 영화 〈토탈리콜〉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21세기 말의 사회는 생화학전으로 황폐화한 지구다. 지금도 전쟁과 생태계 파괴로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21세기 말의 지구는 극단적이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영화에서 노동자들은 브리튼 연방과 콜로니에 밀집해 산다. 노동자들이 단순 반복되고 고된 삶에 환멸을 느끼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소외된 삶을 반영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콜로니 노동자들이 생산한 드로이드가 콜로니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경찰이 된다는 사실이다. 노동을 통해 축적된 자본이 노동자들의 삶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논리와 유사하다.

브리튼 연방 수상이 콜로니에 대한 공공 지원을 삭감하고, 테러를 조작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서 우리는 현실 자본주의 국가 지배자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은 생산비용을 줄이고 자신들의 이윤을 늘리려고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한다. 유럽 지배자

들이 재정 긴축을 도모하거나, 한국의 보수 정당 지도자들이 사회 복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지배자들은 안보와 치안을 명분으로 대중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사회를 단속하려 했거나, 한국 지배자들이 분단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는 게 바로 그 사례다.

브리튼 연방 수상은 심지어 부족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고 대중들을 학살하려고 까지 했다. 이 모습은 ‘용산참사처럼 재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철거를 단행한 한국 지배자들과 닮았다.

나는 이 영화에서 콜로니 저항군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브리튼 연방의 수상은 저항군이 잔인무도한 테러범이라고 대중에게 선전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한다. 한국의 지배자들이 좌파가 과격한 폭력 투쟁을 일삼는다고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좌파를 탄압해 온 현실과 맞아떨어진다.

콜로니의 해방을 가져다줄 수 있는 건 콜로니 대중 스스로의 저항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리콜하기를 바란다.

권도반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철수를 좋아했고 3학년 때부터 안철수가 미워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놈만 되는 세상이었고 되는 놈들은 주로 돈 있는 놈들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불만 갖기 전에 노력하라”는 질책 같은 말을 듣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99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데도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매체로부터 세뇌당

하고, 뿌연 시야 속에서 다른 길을 달려왔다.

극단적인 묘사를 빌리면 지금 체제에서 사람들은 서로 칼을 겨누고 있고 주로 썰리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다. 대중들은 정신없이 무엇이 서로를 썰게 만드는지 모른 채 칼을 휘두른다. 여기서 자본가는 살점 1그램이라도 썰리고 있나 모르겠다.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하면서 대중에

연은정

‘조직노동’에 대한 진보신당 주장의 문제점

진보신당은 ‘낡은’ 조직노동자 대신 ‘배제된 노동’을 정치의 장으로 이끌어 새로운 노동자 정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기존의 진보정치의 실패가 전적으로 ‘조직노동’의 책임이며 ‘조직노동’이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더 이상 포석어 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선언했다.

불안정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은 일견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조직노동운동에 대한 이 같은 언행은 지금껏 자본이 노동운동을 약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물질적, 심리적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연대의식을 해쳐 놓아 빚어진 서로의 차이를 융합시키는 데 미진했던 기존 노동운동의 전략적 실수들을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양자 간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또한 현재진행형인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인 이른바 ‘기존’ 진보정치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도를 위임했던 매우 다양한 부류와 성향의 현장 노동자

게 살점을 얻는다. 이 체제가 자본가를 만들고 착취를 만들었다.

안철수 또한 자본가다. 안철수는 이 체제에 분노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말하는 해결책은 서로 조금씩만 썰자는 거다. 어쨌든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서로 조금씩만 썰어 가는 게 아니라 이 칼을 쥐어 주는 체제를 바꾸는 것 아닐까.

김동혁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부산 포럼

21세기에도 마르크스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연사 : 이정규(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9월 18일(화) 오후 6시

장소 : 부산대학교(강의실 추후 공지)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5331-1968

서울 동부지구 포럼

독도, 다오위다오, 쿠릴 열도 —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미중 갈등

연사 : 미정

일시 : 9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예행)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9453-5318, 010-6319-3062

서울 중북부지구 포럼

독도, 다오위다오, 난시군도 ...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연사 : 김용욱(레프트21) 기자)

일시 : 9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예행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8860-4128

서울 서부지구 포럼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 우다야 라이(민주노동 이주노동자 조직자) / 이정원(이주공동행동 공동조직자)

일시 : 9월 20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미정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7725-9823

서울 남부지구 포럼

격화하는 영토분쟁과 패권경쟁 — 동아시아는 어디로?

연사 : 김영익(레프트21) 기자)

일시 : 9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공간터하기공간 8호실(강남역 11번 출구 버거킹 뒤편 세경빌딩 4층)

참가비 : 5천 원(장소 대여비, 음료 제공)

문의 : 010-9401-1370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김정우 지부장

지난 8월 28일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한 화하려던 박근혜를 온몸으로 막아선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인터뷰했다.

“박근혜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은 외면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서린 곳을 찾아가는 행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과거와 화해 운운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22명이 죽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가 대한문에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태일 재단을 찾아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사기극입니다. 전태일 재단을 찾아왔으나 안되니 다시 이동해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한화를 하려는 그 더러운 행위에 분노스러웠고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사와 박근혜 선거 캠프 앞에서 20여 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만남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비치기 위한 사기극이고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하겠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쌍용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찾아오는 것은 언론을 의식한 또 다른 사기극, 쇼일 뿐입니다.

인터뷰·정리 유병규



사진 제공 (노동과사회) 문정희 기자

박근혜의 한화를 가로막는 김정우 지부장 ‘살아 있는 전태일의 역사를 잡고 끌어내는 것이 박근혜식 ‘통합’ 사기극의 본질이다.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몇달 전 통합진보당 서버를 강제 탈취했던 검찰이 점점 발톱을 드러내며 진보진영을 옥죄고 있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당시 중복 투표가 확인된 3백70여 곳을 이 잡듯이 뒤지고 진보진영을 흠집 내려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원의 병원 네 곳과 전주의 철도·금속·화섬노조 산하 노동조합 일곱 곳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고, 8천 명에 이르는 통합진보당 당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 측에 넘겨 버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정보를 건네 받은 전주예수병원의 병원장이 “(병원 전산실에서) 투표한 사람을 확

인해 인사조치 하라” 하고 위협하는 등 노동자의 정치 활동 박탈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 1백여 명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와 강제구인 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

이중잣대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먼지 털기 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틈타 진보세력 전체를 위축시키고, 특히 진보정치의 핵심 기반인 노동 현장에서 환멸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1퍼센트’의 썩어 문드러진 문

둥이인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 현재 탄압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이상호는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린 박희태를 봐주고 수사를 대충 마무리한 장본인이다. 그 뒷선인 법무장관 권재진은 이명박 정부의 온갖 권력형 비리에 이름을 올린 부패 몸통이고, 검찰총장 한상대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부패 오물로 가득한 자다.

이런 자들이 마치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양 행세하는 것은 극도로 구역질 나는 일이다. 검찰이 최근 공천 장사로 한몫 챙긴 비리 집단 새누리당은 덮어

버리고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이중잣대다.

검찰은 당원 명부를 활용해 대선 국면까지 필요할 때마다 진보 인사들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등 진보진영을 옥죄려 할 것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가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의혹으로만 한정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고, 당장 통합진보당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보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오로지 진보진영 내부에서 원칙과 대의에 입각한 민주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박성환

교과부 ‘부실’대학 선정

끔찍한 고통전가 중단하라!

교과부는 8월 31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부실’대학을 발표했다. 서울 소재 대학인 국민대와 세종대를 포함해 교과부 평가 기준상 하위 15퍼센트인 대학 43곳을 ‘부실’로 낙인찍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고 그 대학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또 이 대학 중 일부는 퇴출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공개하면서 구조조정 압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벌써 대학 5개가 퇴출됐다.

또 퇴출되지 않더라도 ‘부실’ 딱지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대학들이 무자비한 학과통폐합을 추진했다.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는 정치외교학과, 한

국문화학과 등 6개 학과가 폐과되고 5개 학과가 통폐합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교수·교직원 등이 고통 받았다. 하루 아침에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퇴출된 학생과 일자리를 잃은 교직원이 생겨났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은 ‘부실 대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고 취업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은 기준부터 문제투성이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은 취업률이 낮은 예술계열 대학이나 재학생 충원률이 낮은 지방대학들에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또 취업률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다 보니 대학들은 취업률이 낮은 순수학문을 통폐합시키며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책임 전가

그러나 낮은 취업률의 진정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삼성·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막대한 순수익을 올리면서도 신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돈을 퍼 주면서도 일자리 창출 공약은 지키지 않았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이렇게 자신이 낳은 실업의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부실’대학을 바꾸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정부의 대학 지원을 시급하게 늘려야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은 내팽개치고 대학 평가 기준에 산학협력 수익률 등을 포함시키며 대학의 시장화를 더욱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이번엔 선정된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으려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

다 자살하기도 했다. 또한 국공립대학들에게는 총장직선제 폐지 유무를 평가지표로 내세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공립대학들을 구조조정하려 하고 있다.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 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 살인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진정으로 부실한 대학은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전체 대학에 구조조정 압력을 강화하고, 실업과 열악한 교육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이니 만큼 이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이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